



# 워싱턴통상정보

2025.03.28

## 자동차 관세 관련 백악관 발표 주요 내용

이후권 과장(wg.lee@kita.or.kr)

※ 이하 시간 표기는 미국 현지시간(EST)

□ 3/26(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 발표(4/3 발효)

- (도입 배경) 외국 기업이 누려온 공격적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과도한 수입 의존으로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된 美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
    - 1985년 미국내 생산규모는 약 1,100만 대로, 이중 97%가 미국 소유 기업에 의해 조립되었으나, 2024년에는 美 전역 자동차 판매량(1,600만 대) 중 50%(800만 대)가 수입됨
    - 국내 생산분(800만 대)의 미국산 부품 비중은 평균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판매량 중 실질적으로 미국산으로 분류 가능한 차량 비중은 25%에 그침
    - 2024년 미국의 자동차 부품 무역적자는 935억 달러 기록
    - 2024년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이중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분야는 2000년 대비 34% 감소한 55만 3,300명으로 집계됨
    - 2023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R&D 투자 비중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 지출의 16%에 그쳐 유럽 기업들(53%) 대비 크게 낮은 수준
    - 기존 무역협정(USMCA, 한미 FTA 등)만으로는 미국 산업 보호 및 리쇼어링 유도에 한계가 있음
  - (목적)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 조치 단행
    - 수입 자동차의 미국 시장점유율 제한, 국내 생산·고용 확대, 미국산 자동차 구매 확대 등 유도
  - (대상 품목)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품목을 선별하여 관세 적용
    - 수입 완성차 : 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카고밴, 경량트럭 등
    - 수입 부품 :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전자 부품 등
  - (완화 기준) 부분적으로라도 국내 생산 유인과 북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관세 적용 완화 기준 설정
    - 수입업체에 미국산 자율인증 기회를 부여하여 미국산 부품 비중에 따른 관세 면제
    - USMCA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과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면제
- \* 상무부 및 관세청(CBP)과 협력하여 외국산 가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

## □ 상기 조치 발표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관세 정책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강조

\* 백악관 발표에 포함되나 일부 주장에 대한 출처는 미확인

-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1기에 도입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 및 철강 산업의 리쇼어링 유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3년 보고서에서 232조,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중국산 수입 감소 및 미국 내 생산 확대에 이어졌으며,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
  - 美 싱크탱크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트럼프 1기 당시의 관세 조치와 물가 상승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가격 영향도 일시적이었다고 평가
  - 美 싱크탱크 Atlantic Council은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분석
  - 2023년 자넷 옐런 前 재무장관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가 체감할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발언
  - 2024년 경제 분석 보고서는 10% 보편 관세 도입 시 △미국 경제 성장(+7,280억 달러), △고용 창출(+280만 개), △가계 실질소득 증가(+5.7%)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 ## □ 금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구적(permanent) 조치임을 명시한 점에서 단기적 무역 제재와 차별화되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자립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짐
-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 통제권 회수에 주력한 조치로 평가
    - 자동차 이외 의약품, 목재 등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전반적인 미국 산업정책의 보호 주의적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
  - 非미국산 부품 가치만큼 관세 적용을 위한 인증 절차 마련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립 단계부터 실제 적용까지 정부와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혼란이 예상됨
  - 12개 외국 자동차 기업을 대변하는 美 무역단체 Autos Drive America는 성명을 통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축소, 고용 위축을 경고

---

“The tariffs imposed today will make it more expensive to produce and sell cars in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leading to higher prices, fewer options for consumers, and fewer manufacturing jobs in the U.S.”  
(2025. 3. 27., Auto Drive America 성명문 중)

---

## 참고 자료

- 2025.3.26(수)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justs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 2025.3.26(수) Inside US Trade, Trump: ‘Permanent’ 25 percent auto tariffs to take effect next week